

# ‘외유’ 취소 잘못했지만 연금 개혁 협상은 계속해야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고갈 시점을 7년 늦춘다고 하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 안에 대해 국회에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연금 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게 편은 안 하지만 못할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1인이 얼마나 문제 있는 방안인지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 15.85%, 받는 돈 50%였다. 1인과 받는 돈은 같

우려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 연금특위 막판 협상 결렬로 유럽 외유성 출장도 취소 협상 계속해 절충안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선 구조 개혁 논의하길

지만 내는 돈은 3%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이다. 21년 전보다 지금 저출생·고령화 상황이 훨씬 나빠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공론화위 논의에서도 연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진짜 ‘재정 안정안’은 내는 돈 15%, 받는 돈 40%였다. 받는 돈은 지금과 같이 하면서 내는 돈은 15% 정도로는 올라야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이번 공론화위 최종 투표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우리 국민연금의 내는 돈은 1998년

소득의 9%로 올린 이후 26년째 손을 대지 못했다. 그래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소폭이라도 인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국회로 넘기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화급한 문제인 것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1인과 2인의 평균 등 적절한 선에서 절충하기만 해도 받는 돈을 높여서 미래 세대의 부담도 훨씬 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간사단과 개혁안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하기로 했다. 7일 막판 협상 결렬로 일정을 취소했다. 외유 일정 취소는 잘된 것이다. 두 나라가 연금 선진국인 건 하지만 이제 와서 현지에 가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지만 협상은 계속해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아직 3주 이상이 남아 있는데 특위 활동 종료로 선언할 이유가 없다. 막판 협상에서 여야가 주장한 수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 조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과의 관계, 출산율과 경제 상황과 다른 자동 조절 장치 도입 등 2차 ‘코끼리 옮기기’ 작업에 시동을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준의 맛과 섬 [189]

## 포항 고래전골

고래수육은 맛을 보았지만 전골은 처음이다. 그때도 조심스러웠다. 불법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라는 것은 알았지만 갈등했다. 이 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팔팔 끓는 전골 국물을 한 수저 맛보고 갈등은 사라졌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울릉도로 가는 긴 뱃길을 앞두고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다. 포항 죽도어시장에서다.

“고래는 불법으로 잡을 수 없어. 잡혀가요. 그물에 걸려 죽은 것만 팔 수 있어요.” 주저하는 나를 두고 주인이 하는 말이다. 수육을 먹다가 옆에 주민 두 명이 전골을 추가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다. 전골 양이 많을 거라 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술도 한 병 더 시켰다. 밤새 배를 탈 생각을 하니

수육만으로는 아쉬웠다. 게다가 출발하는 시간도 자정 무렵이다. 저녁을 먹고도 많이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에 수육 대자와 전골을 시킨 단체 손님들이 어오고, 소자와 전골을 시킨 연인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포장주문을 한 손님이 몇 명 더 나왔다.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많고 전골 주문도 꽤 있다.

고래는 동해 포항이나 울산뿐만 아니라 흑산도, 어청도 등 서해에서도 포획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래를 먹으려고 이방인이 조선 바다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렇게 조선 바다는 밖에 알려졌다. 울산 반구대에서 보듯이 우리 민족도 일찍부터 고래잡이에 나섰다. 흑산도에서 만난 주민은 장생포 선적의 고래잡이 어선을 탔지만 중요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 중요한 일은



‘불질’이었다. 포경선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포수를 말한다. 오죽하면 “장생포 포수, 울산군수하고 안 바꾼다”고 했을까. 고래잡이는 말은 일에 따라 나누는 몫이 다르다. 포수는 선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당을 받는다. “전골을 끓이는데 육수를 만드나요”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고래는 품고 있는 기름이 풍부해 육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고래고기만 넣어요” 간단히 대답이 전골 소리에 묻혔다. 고기는 쇠고기 같고, 국물은 진하고 고소하다. 느끼하지 않아서 만족스럽다. 전골을 시키지 않았다면 후회할 뻔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마치 정권 잡은 듯한 巨野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만원 지원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가 곧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54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부여돼 있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돼 있다. 또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처분적 법률이 적용된 사례는 전두환 은닉 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한 것 뿐이다. 전 국민에게 영향 미치는 재정 지출을 법률로 한 경우는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전 국민 지원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헌법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정부 노

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25만원 지급’이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에 고물가가 경제와 서민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고(高)금리로 자영업자나 다중 채무자가 고통받고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돈 뿌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억지에 가깝다. 불난 데 기름 끼얹는 것과 같다. 부자나 중상류층은 정부가 돈을 준다고 더 소비하지도 않는다. 현금을 뿌린다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옳다.

나랏빚이 1100조원이 넘고 작년 1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이른다. 민주당 집권 시절의 방만한 씀씀이가 낱은 결과다. 그렇게 국가 재정을 부실화시켜 놓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번번이 몽게더니 이제 또 전 국민 돈 뿌리기를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무책임하다.

###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때 사정기관 장악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폐지한 민정수석직을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2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복원하게 됐다”고 했다. 김 수석도 “정적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어이하게 대처하고,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이 이를 바로잡고 민심을 제대로 수집·반영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신임 수석에 민심 청취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을 통제하고 대통령 주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 산하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과

거 정부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 많았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심 전달이 목적이려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아닌 법률가도 많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김 여사 수사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역대 정권은 민정수석을 통해 권력기관을 관리·통제하려 했다. 민정수석은 주요 사건 수사 정보를 수집해 올리고 대통령의 생각을 검점에 전달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전 장관 사태, 울산시장 선거 불발 관여, 월성 원전 수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한다”고 했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채 상병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언론에만도 수도 없이 표출돼 왔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한다면 한다.

### 이상한 尹·李 회담 풍경

합성득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학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언론 인터뷰를 했다. 합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임 교수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다.

인터뷰를 보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을 총리에 기용하지 않겠다” “회담이 잘되면 골프 회동과 부부 동반 모임도 갖는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공식 기구와 참모들 외에 다른 비공식 라인도 활용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회담은 비서실 같은 공식 조직을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를 비서실장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반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은 당 게시판에 “대국민 사과에 인색했던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너무 굴욕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일부 같은 당 사람들을 대했던 적대적 태도와도 너무 다르다. 무엇이 진짜 대통령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담,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 활동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 맡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정무수석과 정부비서관들은 국회의 여야 대표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대통령의 뜻을 정치권에 전하고, 여당과 야당이 가려워하는 곳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싸우던 여야가 어느 날 극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대통령실의 정부 기능 때문이었다.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당 대표와 만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까지 가동됐다 해도 꼭 타당한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실 내부 비선 라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터여서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금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회담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거나 자신들의 역할을 부풀려 자찬하는 일도 벌어진다.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동영상 시청

45.08% 있다, 앉아서 망할 건가
newdaily.co.kr 뉴데일리

## 이재명의 특검 폭주는 [제2 탄핵] 정변 4~5단계... [윤석열 정권 타도] 국면 도달했다

### 빨리, 또 새로 해야 할 재판·수사 6가지

- 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② 조국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 ③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정체
- ④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대통령 전용기 사용 진상
- ⑤ 탈북 어민 강제복송+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물이 진상
- 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임종석·조국·문재인 수사 소추

### 50.56%(지역구 득표율)로 정변 시작

이재명 민주당은 국회를 ★ 혁명 독재 기구로 ★ 반혁명 세력 숙청 기관으로 ★ 자기편 중대 범죄 피고인들의 치외법권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 제상병 특검 ★ 김건희 특검 ★ 한동훈 특검 ★ 조국 특검 ★ 송철호 특검 ★ 이화영 특검 ★ 양평 고속도로 특검을 줄줄이 들어낸다. 무엇 하자는 것인가?

### 거의 다 망한 건가?

오늘의 특검 공세는 이 시나리오의 4~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자유의 형제(精神)는 너무나 허약하고 초췌하다.

★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싸움 의지도, 능력도 없다.

★ 여권은 지리멸렬(支離滅裂), 공가무 집안이다.

★ 언론은 대통령 밀어내는데 제미를 들었다.

★ 과반의 유권자들이 중대 범죄 피고인들, 혐의자들, 욕쟁이를 좋다고 찍었다. 망조(亡兆)다.

### 수사할게 그것뿐이라

그러나 자유의 에스프리(정신)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제2 탄핵정변 시나리오

[제2의 탄핵 정변]을 일으키려는 진군 나팔소리다. 정변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건(件)]을 신속히 매듭지으라 지시했다. 그게? 그렇다면 왜 그것뿐이라?

싸워나 보고서 죽어라...

- ① 사법부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매듭지으라! 강규태 판사는 재판을 무한정 끌었다. [조희대 사법부]도 꾸물거리지 말라!
- ② 대법원은 [조국 사건]을 신속히 확정 판결하라! 조국은 2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김상진 자유 활동가는 1심 판결이 나기 무섭게 뺑간에 처넣었으면서!
- ③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엔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가? 수사하라! 국가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기밀을 김정은에게 왜 넘겼나?
- ④ 2021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대통령 전용기 사용]은 합당했다. 부당했나? 수사하라!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건 거짓”이라 했다. 어느 게 맞나? 수사하라!

### 문재인 당시의 [탈북 어민 강제복송+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물이]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누명을 씌어 사지로 몰아넣은 처사였다. 수사하라!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소추에서 임종석·조국·문재인을 제외하는 것은 옳았나? 더 수사하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장 위 대응 투쟁에 나서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류근일 칼럼: “윤기가 머리 끝까지 솟구친다”

“국민의힘은 나를 잘못 배당된 음식 취급” 이재명 부부·법조·의인(義人)의 운명

류근일 칼럼:尹 대통령에게도 다시 강조한다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당부한다... 해야 할 세 가지, 절대 하면 안 될 한 가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5월 6일 게재되었습니다.